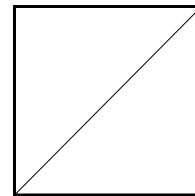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21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4. 2. 7. (제 3 차)	

한국투자증권(주)에 대한  
정기검사 결과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 원 장 김 소 영
제출 연월일	2024. 2. 7.

## 1. 의결주문

한국투자증권(주)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한국투자증권(주)에 대한 정기검사(검사기간 : 2022.9.22.~2022.11.9.) 결과 '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'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이를 분리하여 先처리하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'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'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') 제449조에 따라 한국투자증권(주)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(붙임)

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7호, 제449조(과태료) 제1항 제29호

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5항 제7호,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[별표22]

「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3항, [별표3]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제1항, 제19조(과태료 부과 제척기간) 제1항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

※ 관계 법규는 안전(붙임) 참고

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2차(2024.1.25.) 제재심의위원회 심의필

## <별지>

한국투자증권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# 1. 조치내용

#### ☐ 기관에 대한 조치

- 한국투자증권(주) : 과태료 40백만원 부과\*

\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- 조치사유 :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, 제449조 제1항 제29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7호, 제390조, [별표22], 「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제1항, 제3항, [별표3]

### 2. 조치사유

#### 가.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

- ☐ 투자매매·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- 한국투자증권(주) ○○부 및 △△△△부는 20XX.XX.XX. ○○○○○○ ○유한회사(이하 ‘○○○○○○○○’)이 (주)◇◇◇◇◇◇주식(코스닥) ●●●●,●●●●주를 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주당 ▲,▲▲▲원에 매수한 후 동 주식 전량을 다른 특정 투자자들에게 주당 ◀,◀◀◀원에 매도(거래 당일 종가 ◀,◀◀◀원)하는 시간외 대량매매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

- 해당 거래가 인가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중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○○○○○○○○의 무인가 투자중개행위를 정상적인 주식매매의 형태로 감추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
- 동 위법거래 중개의 수탁거부 사유 해당 여부 등 적정성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, 오히려 내규(「증권위탁증거금징수지침」)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에 대한 신용심사 및 승인절차 없이 위탁 증거금을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

(붙임)

## 관계 법규

### 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**제7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**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**제422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**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해임요구
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3. 문책경고
4. 주의적 경고
5. 주의
6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 면직
2. 6개월 이내의 정직
3. 감봉
4. 견책
5. 경고
6. 주의
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·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관리·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·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.

**제449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② 제63조제1항(제289조, 제304조, 제328조, 제367조,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(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)가 부과·징수한다.

## 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**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7.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
**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[별표 20]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(제387조제3항 관련)

14. 법 41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(법 제335조의10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가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

나.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

[별표 2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0조 관련)

#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터. 법 제71조(제7호에 한정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정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정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정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29호	5,000

## 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-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**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 및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### <별표3> 과태료부과기준 (2017.10.19.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개정 後)

#### 2. 과태료 산정방식

- 가.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(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.
- 나. (생략)
- 다.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(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산정한다.
- 라. 위반자에게 가중·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·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.

#### 3. 예정금액의 산정

-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동기 위반결과	상	중	하
중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중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

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  
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 
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 
경우 등을 의미

(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
(3) 경 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 
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 
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 
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
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 
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 
중과실에 의한 경우

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**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 
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 
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 
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**제19조(과태료 부과와 제척기간)**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 
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)부터 5년이 경과한  
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

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

**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
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과	금융투자검사1국
연 락 처	02-2100-2653	02-3145-7025